

사설

외면당하는 학생자치, 존재 이유부터 되짚어야

서울캠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2차 연장 투표 끝에 가까스로 성사됐다. 점점 낮아지는 학생 자치를 향한 관심이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 주요 19개 대학 중 총 8개 대학이 현재 총학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무려 42%에 달하는 수치다. 대학 사회의 학생 자치가 점차 기반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총학 선거는 개표조차 어려워졌고, 입후보자 부재로 인한 보궐선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은 갈수록 형식적이며, 정책적인 모습보다는 콘서트 책상과 운동장 잔디 교체 등 대학 총학생회 공약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학생 자치의 신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총학 보궐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한 학생에게 투표를 왜 안

했냐고 묻은 적이 있다. 그는 “비대위나 총학 체제나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이 짧은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학생 대표기구 존재 이유를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가? 학생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학생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총학은 학생 사회의 대표로서 학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역할이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선본의 공약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교양 과목 절대평가 시행’, ‘통합 앱 개선’, ‘대외활동 가점 확보’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신문과 VOU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역시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공약 실현 가

능성에 “유관 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같은 실현이 다소 어려워 보이는 공약이더라도 총학은 두려움을 느껴선 안된다”는 식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만 털어놓았다. ‘융합’에 대한 키워드 질문에 ‘기업 연계형 대외활동 가점 확보’, ‘창업 연계형 커리큘럼’ 등 다소 논점과 벗어 나는 대답이 주를 이루기도 했다.

단선이 주는 긴장감의 감소 때문인지 몰라도, 형식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을 나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는가다. 출마한 선본에 대한 신뢰는 아니나 다를까, 몇 해 전부터 낮은 투표율로 인한 투표 기간 연장의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숙명여대 총학 비대위 김희원 위원장은 “일부 총학이 실질적 성

과 없이 자기 목적적 운영을 하며 향후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 발판으로 삼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학생 자치의 중심인 총학은 학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책임감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실을 반영한 회칙 개정 또한 필요하다. 낮은 투표율로 반복되는 개표 연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 기준 재검토라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 자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관심과 참여, 신뢰와 책임,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력 위에서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총학 스스로가 본인들의 역할을 되짚고, 학생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다. 학생이 외면하는 자치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세시봉

리노베이션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보고 그가 누구였는지 기억을 더듬은 적이 있다. 권력을 겨냥한 강골 검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발언이 퍼뜩 떠올랐다.

그렇게 3년이 흐른 겨울, 계엄을 보니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현 대통령제에 의문을 품게 됐다.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검사는, 전적으로 진영 논리에 의해 정치판에 초대됐다. 승자 독식, 권력 독점으로 대표되는 현 대통령제는 결국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번 계엄으로 미뤄 봤을 때, 현 대통령제를 향한 견제 기능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비해 미약하다. 대통령이 모두 휘두르는 인사권이 대표적이다. 중앙 부처 장·차관과 고위직 공무원,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주는 인사만 7천 명에 달한다. 선거에서 이긴 쪽은 5년간 거의 모든 보직을 가져간다. 임명을 정해놓고 하는 인사청문회는 볼 때마다 피로하기만 하다. 민생을 신경 쓰는 척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인 것이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인사권 역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1987년부터 약 40년간 대통령제는 지속되었다. 변하지 않던 체제로 인해 조금씩 조금씩 끓어왔던 것이 결국 지난 12월에 터진 것이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씩씩하게도,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거야의 대표는 소극적이다. 202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이 무색하게도 개헌에는 침묵하고 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해진 날씨를 보며 탄핵 심판 선고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낀다. 그만큼 개헌을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방식으로 권한 분산을 꾀할 수 있지만, 이렇다 할 하나의 해법이나 대안은 아직 마땅치 않다. 눈앞에 다가온 기회가 권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회가 아닌, 그 권력으로 어떻게 하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회여야 한다.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보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대해본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체계적인 학내 안전 시스템을 위해

안전불감증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물리적 공간 안전은 학생의 일상과 학내 활동을 지탱하는 기본 전제다. 그런데 지난 27일 서울캠 학생회관 일부 천장이 내려앉은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천장을 지탱하는 지지대인 전산 볼트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학생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했기에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학교의 대응은 아쉬웠다. 본격적인 현장 점검은 우리신문이 학교 측에 발생 경위를 묻은 직후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점검에 나선 직원들이 천장 내부를 들여다보며 “지지대가 없네”라며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다. 총동아리연합회와 각 중앙동아리 대표자들은 앞서 학교 측에 상황을 제보했다고 밝혔지만, 관리팀은 요청 접수가

된 지 인지하지 못했다.

“요청이 너무 많이 쌓여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의외의 답이다. 다수 학생이 위험을 감지하고 직접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조차 학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학내 안전 시스템에 대한 좀더 촘촘한 대처의 필요성이 드러난 지점이다.

비단 학생회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캠퍼스에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넘는 건물들이 적지 않다. 그 천장 속 구조물들이 어떤 상태인지, 전산 볼트는 제대로 박혀 있는지, 지금 당장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학생은 알 길이 없다.

관리의 공백은 곧 위험으로 이어진다. 그 위험은 언제나 학생 곁에 도사리고 있다. 구조물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점검에 나서는 대응 방식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부상자가 나오지 않아 안도감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대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만평 학생들은 학내 공간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